영산강 살리기 이슈 점검

5 지역경제 유발 효과

"생산유발 1조8600억원" "수도권 대기업들만 혜택"

'경제 효과'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다.

대규모 건설 기계장비가 투입되는 탓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한데다, 그나마 일부 수도권 건설업체가 '독식'하다시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과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속도 논란까지 포함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 그만큼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과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놓고 궁금해 하고 있다.

영산강 구간 지역업체 40% 참여
호남권 일자리 1만8000개 창출
여론수렴 없이 착공 '속도전' 논란

25일 나주시 노안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 6공구에서는 승촌보 공사가 한창이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공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덤프트럭이 분주히 오가며 공사 현장의 흙을 퍼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생산 유발효과 (단위:천억원·천명 %)

호남권 유발효과					기타권	전국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합계	유발효과	유발효과
13.2(51.2)	3.1(2.0)	2.2(8.5)	0.1(0.4)	18.6(72.1)	7.2(27.9)	25.8(100.0)

■ 취업 유발효과

호남권 유발효과					기타권	전국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합계	유발효과	유발효과
14.0(59.6)	1.3(5.5)	2.5(0.6)	0.4(1.7)	18.2(77.4)	5.3(22.6)	23.5(100.0)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공구별 참여업체 현황

		업체명	참여율	소재지
영산강	1공구	거동건설	50%	화순
		대우조선해양	50%	용인
	2공구	삼성중공업	40%	서울
		풍림산업(주)	20%	서울
		가산토건(주)	9%	목포
		(주)남흥건설	9%	담양
		신화종합건설(주)	7%	화순
		이연개발(주)	5%	의정부
		월드건설(주)	5%	서울
		(주)금강건설	5%	화순
	3공구	대아건설	60%	평택
		남도건설	40%	화순
		남도건설(조경)	100%	화순
	4공구	가산토건(주)	56%	목포
		삼부토건(주)	44%	서울중구
	5공구	(주)영무토건	50%	화순
		(주)삼호	40%	인천
		세종건설사업(주)	10%	강진
	6공구	(주)한양	42%	인천
		금광기업(주)	15%	화순
		남해종합개발	7%	화순
		삼성에버랜드(주)	7%	서울
		새천년종합건설	7%	나주
		우미건설(주)	7%	장성
		남도건설(주)	5%	화순
		대선건설(주)	5%	무안
		해동건설(주)	5%	여수
	7공구	대진종합건설(주)	70%	광주
		(주)동양건설산업	30%	서울
	8공구	제이에이건설(주)	55%	순천
		청도건설(주)	45%	화성
	9공구	(주)한반도건설	50%	진주
		(주)남흥건설	50%	전남
	10공구	(주)토형산업	50%	서울
		한국종합건설(주)	50%	
	담양 홍수 조절지	(주)대우건설	50%	서울
		진영건설(주)	20%	나주
		새한종합건설	20%	담양
		진흥건설	10%	광주
	화순 홍수 조절지	(주)한양	60%	인천
		청호이엔씨(주)	20%	화순
		강남건설(주)	20%	영암
	함평 2지구	(주)충남토건	30%	충남
		진도종합건설(주)	30%	충남
		(주)대동이엔씨	30%	부산
		한림이엔지(주)	10%	전남
		성환건설(조경)	100%	충남
왕곡제		명진토건(주)	100%	군산
영산지구		대원건설산업(주)	89.8%	인천
		성룡건설산업(주)	10.2%	당진
몽탄제		동남종합건설(주)	50%	울산
		(유)한백종합건설	50%	전북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부분 혜택이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단기 경기부양에 도움은 되겠지만 민간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해 국가 부채만 늘어나게 하는, 이른바 '삽질'사업이라는 것.

영산강 살리기 구간만 하더라도 굵직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을 수도권 건설사가 수주한데다, 이들 업체가 수도권에서 공사 자재까지 실어나를 수 있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통계 수치를 적용한 결과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영산강·섬진강 사업 등으로 전라권의 경우 4만71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세미나를 통해 호남권에만 1조8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4500억원의 임금 소득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비롯, 1만82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수도권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턴키 공사의 경우 20%, 일반 공사는 40% 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업체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영산강·섬진강·금강 일부 등 4대강 살리기 구간의 도급액을 기준으로 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8.1%다. 영산강 16개 구간의 경우 50개 업체 가운데 26개 광주·전남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지역인 섬진강 1공구도 지역 업체가 40%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익산청은 또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비롯, 공사자재와 건설장비를 투입하고 지역 내 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현재까지 영산강 6공구(승촌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인원도 4391대에 1만747명에 달한다는 게 익산청측 설명이다. 익산청 주도로 추진되는 영산강·섬진강 등 사업까지 포함하면 2만1485대의 장비와 9만4244명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고 4대강 살리기로 주변의 친환경적인 수상레저·문화활동 공간이 함께 조성되는 만큼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돼 향후에는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론 수렴도 없는 '속도전' 논란=영산강 2공구(죽산보) 공정률은 19%로, 당초 계획(10%)보다 빠르다. 정부는 올해 핵심공정의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모든 구간에 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가능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익산청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자체 하천정비사업비 4047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비 3843억 등 모두 789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내년까지 투입될 전체사업비(1조6475억원)의 6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수질·생태계·홍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4대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을 충분히 진행했고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또 공사 착공 이후에도 수시로 지역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홍수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도 이룰 수 있어 최대한 공정률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산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평균 홍수 피해액만 2조7000억원이고 이에따른 복구비도 4조2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사업이 끝나면 홍수 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재해복구비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끝〉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